

與, 윤리위 첫 회의… 설화논란 ‘김재원·태영호’ 징계 착수

사회적 논란으로 부정적 영향 판단
홍준표·천하람·유승민 징계 제외
“2차 회의서 징계수위 결정할 것”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리위가 ‘설화’로 논란이 된 두 최고위원 징계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한 셈이다.

윤리위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뒤 ‘윤리규칙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두 사안에 대해, 동 사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돼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했다. 보도자료에서 밝힌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었다.

윤리위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와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을 한 게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 사유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8일 윤리위는 2차 회의를 앞두고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당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1

로 판단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지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비판 등을 문제로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

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와 관련 윤리위 내부에서는 ‘징계를 개시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당 대표 역시 윤리위에 “객관성·공정성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을 국민이 더욱 사랑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저를 뽑아준 당원, 우리 당 지지자,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당직자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쓰레기, 돈 버리, 성 비위 민주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난달 24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업무상 해프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관련,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징계 요청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4·3사건 발언 논란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징계 결과가 2차 회의 때 나올지는 미정이다. 김 최고위원이 5·18 관련 설화로 논란이 된 만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 징계 수위가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황정근

위원장은 “2차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했다. 2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 질문에도 “그렇게 예상된다”고 답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민심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윤리위는 과거 5·18 관련 실언으로 징계받은 김순례·이종명 전 의원 사례에 대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당시 유가족에게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종명 전 의원도 같은 공청회에서 ‘5·18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광주 폭동”이라는 발언으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대구시장,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규칙 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특권노조, 노동자 이름 먹칠” vs “尹정부 노동탄압 막아내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與野 근로자의 날 논평

국민의힘 “땀의 가치 인정받는 나라로”
민주당 “주69시간으로 노동자 옥죄”
정의당 “노동시간 유연화 단결 저지”

국민의힘은 1일 133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부 노동조합 행태가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33주년 ‘노동절’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막아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3주년인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를 만들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특권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자라는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폐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땀의 가치가 인정받

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에겐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노동의 가치는 더욱 빛났다. 공동체를 지탱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동에 있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안락하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회계 자율점검으로 노조를 옥죄고, 주69시간 근무제로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여당 최고위원은 ‘노조를 열심히 때리겠다’며 노조 해체론을 내뱉고, 극우의 첨병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목사는 ‘대통령실이 노동절날 민주노총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려를 표할 만큼 대한민국의 노동은 위기다. 69시간 근무제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를 넘어 4.5일제로 나아가는 문을 열겠다. 노동조합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청구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권의 거대한 퇴행에 직면한 오늘,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시대적 소명을 다시 한번 무겁게 되새긴다”며 “백년도 훨씬 전인 1886년에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하루 8시간 노동’이 무색하게도, 주 69시간제도 거리낌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개악을 단결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기현 “尹 대통령 방미, 북핵 대응 등 새로운 이정표 수립”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비판엔 ‘흠집내기’ 반박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1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흠집내기, 트집 잡기”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북핵 협력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평가한 김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설치해 우리나라가 핵 운영 발원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 북핵 대응에 특화된 확장 억제력을 강화했다”는 말도 했다.

김 대표는 또 “군사동맹에서 더 나아가 첨단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아울러 자유·평화·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군사 동맹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련 공급망 협력, 우주, 사이버, 인공지

능, 양자 분야까지 동맹 범위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공급망 문제에서 안정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방미 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무려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윤 대통령 방미 행보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자신들의 집권 시절 굴종 외교는 까맣게 잊고 세 살 짜리 먹기인 줄 알면서도 오로지 비난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갈수록 그 언행이 금도를 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현 내정

박광온 원내대표, 4기 인선 발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 대변인, 비서실장 등 민주당 4기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재선의 송기현 의원(사진)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원내 대변인엔 김한규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합류했다.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 담당 대변인으로 홍성국 의원을 내정했다. 원내 대변인은 세 명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했다.

초선의 민병덕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있는 국회 운영과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을 위한 최적의 인선을 위해 주말 동안 폭넓게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송기현 의원을 소개하면서 “정책위 수석부장과 법사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원칙적이면서 유연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라며 “중대 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의 많은 개혁 법안을 뚝심있게 처리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